

'1인 2표제' - 후보간 연대 등 흥행몰이 예고

■ 민주 대선경선 영향 미치는 컷오프 변수들

컷오프 시기 8월말 끝내기엔 일정 촉박 불만

국민·당원 비율 당원 목소리 30%이상 돼야

가중치 적용 논란 지역별 당원 가중치 없애자

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앞서 컷-오프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세부 '룰'을 놓고 대선 주자 진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명의 잠룡이 컷-오프에 참여, 3명이 탈락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어떠한 룰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인 2표제 도입=아직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1인 2표제가 도입된다면 후보들 간의 연대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복잡한 컷-오프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컷-오프의 유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흥행'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1인 1표제로 컷-오프가 진행된다면 후보 적합도보다는 인지도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즉,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등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빅 3'에게는 유리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게는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특성상 1인 2표제가 도입되기 힘들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지도부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

◇컷-오프 시기=일단 지도부에서는 런던 올림픽 폐막 직후인 8월 중순부터 컷-오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컷-오프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 측에서는 컷-오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8월말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3회 이상의 방송 토론회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흥행을 위해서도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컷-오프를 진행하기 보다는 3개 권역에서 후보 연설회를 치르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당원 비율=현재까지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여론조사 30%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치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방형 정당을 지향한다고는 하지

만 당원의 목소리가 30% 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 정치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권적으로 정당 기부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경선을 완전국민참여제에 가깝게 치른다는 점에서 컷-오프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중치 적용 논란=일단 컷-오프에서는 지역별 인구 기준과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전당대회 현장 투표 등에서 나타난 '호남 당원 15표=영남 당원 1표'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지역별 당원에 가중치를 두지 말자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김두관 '신경전'

PK 출신에 '친노 좌장' '리틀 노무현' 지지율 겹쳐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문 고문이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를 거론하자 김 지사는 민주당의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응수하며 사실상 문 고문을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문 고문은 지난달 2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사직을 그만두면 경남도민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고 대선 때 경남에서의 지지를 받게 되

려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이지만 이미 김 지사의 사퇴 입장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김 지사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지사는 2일 자신의 대선 출마 결심이 민주당의 4·11 총선 패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문 고문을 조준했다.

당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문 고문의 분선 경쟁력에 대해 예뮨러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간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는 분석이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이자 친노 그룹의 좌장으로 통한다. 김 지사는 정치적 성장과정인 노 전 대통령과 흡사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친노 지지층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적으로 두 사람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라는 점도 신경 쓰게 하는 대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세균, 광주·전남 방문

'호남민심잡기' 본격 행보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이 3~4일 이틀 간 광주·전남을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다.

정 고문은 이번 호남 방문을 통해 호남 대선 주자라는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끌어안아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정 고문은 3일 KTX를 타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식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양동시장을 방문, 어물전 판매체험 활동을 하는 등 현장체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4일에는 목포 새벽시장 농산물경매장을 찾아 직접 경매 체험을 하고 중매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행정선을 타고 신안 하의도의 갑대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신안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현대상호증권업 조전소도 찾은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학규 "비정규직도 저녁이 있는 삶" 강조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한 민생 정책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손 고문은 2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위

기는 노동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은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노동이 있는 민주주

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풀매주, 넷매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우실 분
▶교육 / 활동비등 550만원
▶특수물건만 취급
▶수료증 투자 가능

투자자 모집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근저당설정 / 가등기 보장
▶년10~30% 수익률
▶6~8개월 소요기간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정치부 기자가 뽑은 차기 대통령 문재인 1위·김두관 2위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선정됐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 여론조사업체 '인지코리아컨설팅'은 지난 1일 일간지·인터넷신문·방송사·주간지에 근무하는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를 한 결과, 문 고문이 가장 높은 25.7%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두관 경남지사(18.5%)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18.0%)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11.7%)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10.8%) 순이었다.

'대통령이 돼선 안 될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 원장(11.7%)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8.6%) ▲이재우 전 특임장관(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정치부 기자 56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설문에는 222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39.2%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서 본회의장을 나갈 때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어나 환송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나가는 통로에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주 "한일정보협정 폐기해야" 맹공

이대통령도 "절차 잘못" 질타

민주통합당은 2일 정부가 체결을 강행하려다 비판 여론에 밀려 연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협정과 관련, 협정 폐기와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외교참사' 등의 강경한 어조를 동원해 여론에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 원회의에서 "21세기에 들어와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한다"며 "이 사안은 총리 해임으로 끝날 사안인 아니고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임내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각 당사자(한일)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범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로 명시돼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한일군사협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각료들을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경선캠프 대변인에 이상일·조운선 의원

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의 대변인에 환영 출신인 이상일(비례대표) 의원과 조운선 전 의원이 2일 내정됐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당한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우며, 비대위 대변인을 역임했다. 조 전 의원은 18대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

공보단장에는 재선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윤 의원은 인선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역임한 친박 핵심 인사다. 공보단은 최경환(3선) 의원이 맡은 캠프 총괄본부의 직속 기구로 정책 홍보와 네거티브 공세 대응 등과 관련한 대(對) 언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